

제192호 (2009. 2. 2)

■ 속보/위기의 건설업

- 영국, 개발 중단된 주택 인수해 사회주택으로 공급

■ 경제 동향

- 세계 경제 성장 둔화폭 증가, 국내 경제의 동조화 심화

■ 정책·경영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25㎢ 해제

■ 정보 마당

- 탄소제로도시-공해 없는 청정도시를 꿈꾼다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녹색뉴딜 사업, 96만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

영국, 개발 중단된 주택 인수해 사회주택으로 공급

- 2008~11년 간 170억 파운드 투자, 주택시장 침체를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로 활용 -

■ 영국 경제 현황

- 영국 경제는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서도 GDP가 전분기 대비 감소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침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경제의 GDP는 3/4분기에 전기 대비 0.6% 감소한 데 이어 4/4분기에서도 전기 대비 1.5% 감소
 - 영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든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며, 4분기에 GDP가 1.5% 감소한 것은 1980년 2/4분기 이후 최대 감소임.
 -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해외시장의 침체에서 기인하는 수출부진에 따른 제조업 생산의 위축(전분기 대비 4.6% 감소)임.
- 영국 경제의 침체는 적어도 4/4분기 이상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국의 파운드화는 달러화나 엔화 대비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음.
 - 영국 정부의 4분기 GDP 실적 발표 이후,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지난 23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인 1.35달러에 거래되었고, 엔화에 대해서는 120엔을 하회하여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 2008년 11월말 영국의 실업자 수는 1,923천명으로 실업률은 6.1%에 달함.

■ 주택시장 현황

- 주택 가격 하락과 신용 경색은 건설산업 특히 주택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하고 있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11월의 건설 발주 물량은 6~8월 발주물량 대비 9%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 특히, 11월 발주 물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38.6% 감소
 - 건설 발주 물량의 축소는 민간 주택건설 부문에서 기인한 바가 큼(민간주택 부문의 신규 발주는 전년 대비 55% 감소).

- the Chartered Institute of Purchasing & Supply and Markit이 발표하는 건설산업의 PMI(the purchasing managers index)가 12월에는 29.3 기록
- PMI가 50 미만인 경우 해당 산업은 위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국 건설산업의 PMI는 12월까지 10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했고, 특히, 12월의 지수는 1997년 PMI 도입 이후 최저 수준임.
- 지자체 담당 부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 내 평균 주택의 가격은 199,732파운드로 지난 12개월 동안 8.6% 감소
- 6~8월 기간 동안 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였으나, 9~11월에는 하락 정도가 심해져 4.4% 감소

■ 영국 정부의 대응책

-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개선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주택 건설업을 부양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 및 재개발을 담당하는 Homes and Communities Agency(HCA)를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0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
- HCA는 대규모 사회주택개발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직접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Housing Association(개별 지역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비영리 공공단체)의 주택공급계획 이행을 촉진하거나, 혹은 Housing Association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함.
- 사회주택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와 보험 및 연기금이 인수에 참여하는 펀드의 주식을 정부가 발행할 예정인데, 정책금리가 낮고 안전한 투자수단이 드문 상황에서 국채 금리수준이라도 정부의 보증이 첨가된다면 보험과 연기금은 인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재고주택과 재원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된 주택들을 인수하여 Housing Association을 통해 사회주택으로 공급

빈재익(연구위원:jipins@cerik.re.kr)

세계 경제 성장 둔화폭 증가, 국내 경제의 동조화 심화

- 2008년 4/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 -3.4% 기록, 예상보다 침체 정도와 속도 심각 -

- 2008년 세계 경제는 금융 위기의 파급 효과가 실물경제로 전이돼 성장이 둔화됐으며 하반기 빠른 침체를 경험함.
 - 2007년 4/4분기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로 시작된 금융 위기로 2008년 상반기 선진국의 실물경제의 위축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신흥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어 개도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가 둔화됨.
- 특히 2008년 4/4분기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등 글로벌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신용 경색이 심화되어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 시기의 경기하강 속도는 국제 전망기관들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2008년 하반기 침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IMF는 지난해 11월 이례적으로 수정 전망을 통하여 2001년 IT 버블 붕괴시와 같은 수치인 2.2% 전망치를 제시함.
 - 그러나, 2008년 4/4분기 세계 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IMF는 다시 2개월 만에 (2009. 1. 28)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대폭 하향한 0.5%로 발표함.
 - IMF는 2009년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계 경제가 2차 대전 이후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함.

IMF의 2008년,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2008	2009
세계	3.4 (3.7)	0.5 (2.2)
선진국	1.0 (1.4)	-2.0 (-0.3)
미국	1.1 (1.4)	-1.6 (-0.7)
일본	-0.3 (0.5)	-2.6 (-0.2)
유로지역	1.0 (1.2)	-2.0 (-0.5)
개도국	6.3 (6.6)	3.3 (5.1)
중국	9.0 (9.7)	6.7 (8.5)
한국	- (4.1)	- (2.0)
인도	7.3 (7.8)	5.1 (6.3)
브라질	5.8 (5.2)	3.5 (3.0)
러시아	6.2 (3.7)	-0.7 (3.5)

주 : ()의 수치는 2008년 11월에 발표한 전망치임. 나머지는 2009년 1월 28일 발표된 전망치로 한국의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IMF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3%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됨.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8 ;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09.

- 한국의 경우 2008년 4/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하여 연간 성장률이 지난 11월 IMF의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는 2.5%를 기록함. 이는 예상보다 세계 경기의 침체 정도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국내 경기의 동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 경제 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4.7% 감소함.
- 지출 측면에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 민간 소비, 설비투자, 재화수출이 모두 큰 폭 감소로 전환됨.
- 4/4분기 국내 경제가 급격히 침체된 것은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여 제조업 생산이 하락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결과로 판단됨.

국내 GDP 및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2000년 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7					2008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GDP)	4.0	4.9	5.1	5.7	5.0	5.8	4.8	3.8	-3.4	2.5
제 조 업	3.8	6.1	6.3	9.5	6.5	9.3	8.5	6.3	-9.2	3.3
건 설 업	3.9	2.7	0.1	1.4	1.8	0.4	-1.4	-0.9	-4.7	-2.0
서 비 스 업	4.1	4.7	5.5	4.8	4.8	4.1	3.3	2.1	0.0	2.3
민 간 소 비	4.1	4.4	4.8	4.6	4.5	3.4	2.3	1.1	-4.4	0.5
설 비 투 자	10.9	11	2.3	6.5	7.6	1.4	0.7	4.7	-14.0	-2.0
건 설 투 자	3.7	1.6	-0.1	0.4	1.2	-1.1	-1.2	-1.3	-6.1	-2.7
재 화 수 출	10.5	10.3	9.0	17.7	12.0	12.0	12.5	8.0	-11.5	4.6

주 :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2/4분기, 3/4분기(잠정), 4/4분기(속보) 자료

-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 회복은 세계 경제 회복과 맞물려 있으며, 세계 경제 회복은 2009년 말이나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정책과 경기부양책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 나타나지만 가시적인 경제 회복을 이루어낼지는 불투명함.
- 모건스탠리의 스티븐로치 아시아 지사장은 미국 경기가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나, 경기가 반등하는 브이(V)형 회복이 아닌 일정 기간 침체기를 거쳐 완만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 향후 세계 경제 회복이 중장기적으로 완만히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25km² 해제

- 지방 도시는 대대적 해제, 수도권GB지자체 지정 구역은 일부 존치 -

■ 국토부 지정 면적의 59.0%인 10,224.8km² 일제히 해제

- 국토부는 지난 1월 23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총 19,149.1km²) 중 국토부가 지정한 17,334.1km²에서 10,224.8km²를 해제함(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 19.1%→8.9%).
 - 지방은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은 전면 해제(단, 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하고, 수도권도 개발완료 및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함.
 -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구역으로 존치함.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2009.1. 23)〉

구 분	면 적(km ²)	비 고
합 계	7,109.26	
수도권 녹지·비도시	3,549.28	서울, 경기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평택·고양·과천·구리·남양주·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양주시 일원·인천 중구·서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수도권·광역권 GB	3,542	수도권,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광고신도시	11.3	보상 미완료 상태이므로 사업지구 존치
인천경제자유구역	5.13	"
강북 뉴타운	1.55	타 뉴타운 지역과 형평을 고려하여 존치

주 : 1) 지정효과는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하며,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됨.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2) 허가제 위반시에는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자료 : 국토해양부.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용도별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180m ² 초과), 상업(200m ² 초과), 공업(660m ² 초과), 녹지(100m ² 초과), 용도미지정지역(90m ² 초과)	
도시외의 지역	농지(500m ² 초과), 임야(1000m ² 초과), 기타(250m ² 초과)	
도시재정비지구	20m ² 이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해당지역 토지가격 상승 우려는 적어

- 국토부의 대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배경에는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2008년 4/4분기부터 토지가격(전국 -4.1%)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허가구역해제로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에 기인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1월 30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 불편 및 민원 해소 등 다소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보상완료 지역과 수도권 택지개발 완료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허가구역 해제가 토지가격 변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은 기존의 뉴타운 지역, 역세권 개발 지역, 도시재정비 지역 등이 지자체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총 1,815.0km²)으로 여전히 존치됨.
 - 지방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역, 경제자유구역, 이전적지(군부대 및 학교) 등이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됨.

〈수도권 지자체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2008. 1. 23)〉

지정자	면적(km ²)	사 유
서울	8.46	2차 뉴타운
	1.33	균형발전촉진지구
	10.35	3차 뉴타운
	1.16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0.38	재정비촉진지구
	0.57	국제업무지구 개발
	27.44	준공업 지역
인천	0.94	제물포 역세권개발
	0.67	가좌재정비촉진지구
	0.29	동인천역주변 재촉진지구
	1.2	도시재정비(남구 주안 24동 일원)
	0.44	인천역주변 촉진지구
경기	4.48	고양시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22.19	도시재정비(남양주, 부천, 안양, 군포, 고양, 의정부, 구리, 평택)
	2.11	뉴타운사업(오산, 남양주, 김포)

엄근용(연구원·kyeong@cerik.re.kr)

탄소제로도시-공해 없는 청정도시를 꿈꾼다

-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도시 마스다르, 5만명이 거주하는 무공해 신도시로 건설 중 -

■ 탄소제로 도시

- 2008년 8월 15일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MB정부의 3대 핵심정책으로 '녹색성장'을 채택하는 등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해 없는 청정도시 건설을 위해 여러 국가들에서 크고 작은 실험도시들을 추진하고 있음.
- 탄소제로 도시란 화석연료(석유, 석탄)를 쓰지 않아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거나 청정에너지를 생산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시키는 무공해 도시를 의미함.
 - 탄소제로는 2002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런던 외곽 지역의 서튼 지역에 3층짜리 탄소제로 주택 100채로 구성된 베드제드(BedZED) 마을이 첫 실험도시가 됨.
 - 현재 진행 중인 탄소제로 실험도시로는 영국의 '노스토', 캐나다의 '선창가', 리비아의 '그린마운틴', 중국 충밍섬의 '동탄', 류저우의 '광탕 추왕예공원', 그리고 UAE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등이 있음.
 - 이들 도시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아부다비의 '마스다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도시-마스다르

- UAE의 석유 자원 부국 아부다비정부는 2007년 9월 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마스다르(Marsdar) 신도시 건설 계획이 포함된 '국가 발전 2030 계획(Plan Abu Dhabi)'을 발표함.
 - 현재 건설 계획이 확정된 탄소제로도시 중 최대 규모인 마스다르는 인구 5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600만²m² 규모의 도시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음.
 - 2008년 2월 도시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2008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4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마스다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공해 도시라는 타이틀 외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험적인 도시로 불리고 있음.
- 지상 구조물에 대한 계획 및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도시 기반 시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착공하였음. 또한, 상용화되지 않은 신기술이나 공법이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실험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확인한 후 설계와 건설에 반영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음.

■ 무공해 도시 마스다르에 동원되는 기술 및 운영계획

- 도시 건설에는 움직이는 모든 것(사람 및 교통), 흐르는 모든 것(전기 및 가스), 그리고 자연조건의 모든 것(바람, 태양, 기후, 온도 등)이 정보(IT)로 감지되어 최적화시키는 기술이 도입됨.
 - 재생 에너지 혹은 재순환 에너지 등 환경과 관련한 에너지 기술(ET)이 도입됨. 또한, 소비되는 에너지나 배출되는 가스, 폐기물 등이 감지 관리되며, 도시 인구가 사용한 후 배출되는 물질을 다시 자원화 하는 바이오 기술(BT)이 도입됨.
- 마스다르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중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풍력, 태양열, 지열을 이용하여 생산하며, 그 분담 비율은 태양광(82%), 재생에너지(17%), 풍력(1%)임.
 - 한편, 이 도시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이 운행될 수 없음. 따라서 배터리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 전기자동차가 주요 교통 수단이 되는데, 이러한 전기자동차의 동력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함.
- 이 밖에 주택에 유비쿼터스 센서가 설치되는데, 이 센서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센서를 통해 실시간 경고를 전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기존 도시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을 75%정도 줄일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석유 매장량 5위, 상주 인구 160만명에 불과한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의 탄소제로 도시가 건설된다는 것은 전세계 및 국내 건설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 27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참여 건축사법 개정안(건축사 자격 등록제도 도입, 건축사의 보험, 공제가입 의무화 등)에 대한 규제 심사
1. 29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위기극복 및 국정운영의 성공전략’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 참석 건설 및 주택·부동산 분야의 경제 위기 극복 및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연구기관 의견 수렴
1. 30	대한주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자문회의 참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의 방향성 제시

■ 신규 정책현안과제 발령

과제명	주요 내용
소규모 복합공사의 합리적인 범위설정 및 영향분석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공사의 범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설업계 및 지역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록기준과 영업범위와의 관계, 등록기준 유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등록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제시
실적공사비 문제해소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공사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와 최저가낙찰제 등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한 문제점 해소방안 도출

■ 대정부 정책 건의 활동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세미나’ 개최
 - 1. 21(수)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연구원은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후원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세미나” 추진
 - 주요 발표 내용
 - (제1주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해외사례 벤치마킹 :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 및 해외 주요국가의 하천개발사례 소개
 - (제2주제)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 : 낙동강, 영산강의 수질 개선,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녹색뉴딜 사업으로서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방안 제시
 - (제3주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각 지역별로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임금소득유발액, 고용창출인원 등을 분석, 제시

녹색 뉴딜 사업, 96만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

정부가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은 ‘친환경’의 틀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한편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친환경적’인 개발은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향후 미래 개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2가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녹색 뉴딜 사업은 크게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을 하는 녹색 SOC 사업과 대체 수자원 개발과 중소댐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는 저탄소·고효율산업 기술,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녹색 생활 등 3가지이다.

녹색 뉴딜 사업은 우선 성장 및 일자리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4대강 살리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와 기업, 민간까지 역할을 분담하며, 예비타당성 검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이에 정부는 녹색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제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조사 수행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해 사업 준비 기간을 실질적으로 1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녹색 뉴딜 사업 36개를 위해 정부는 추가로 4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미 반영돼 있는 재정(4조 3,626억원)까지 합치면 총 50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는 이미 반영된 예산에 따라 생길 것으로 예상됐던 9만 3,000개 외에 86만 3,000개가 더 생겨 모두 95만 6,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연계 사업으로 18조원 투자에 2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3조원)를 통해서도 23만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생겨날 것이다. <국토해양신문, 2009. 1. 20>

박성민(연구위원-smpark@cerik.re.kr)